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 9.



기획예산처

순 서

I .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1
II . 2026~2030년 경제 · 재정운용 여건	2
III . 2026~2030년 재정운용 방향	6
IV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10
V . 재정혁신 이행방안	15
[참 고]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26

I.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제9항)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간담회 운영,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25.12월)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제출 ('26.1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26.4월~)
- 분야별·지역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100건 이상) 개최 ('26.1~5월)
-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26.5월)
- 국가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6.6.22.)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 ('26.7.13.)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 ('26.8.4.)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26.8월중)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6.9월초)

Ⅱ. 2026~2030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 (2026년) 중동전쟁 긴장, 美 관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 2월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폭 확대되고 성장·교역 둔화 흐름
 - 하반기 들어서도 중동 긴장 지속되는 가운데, 美 관세 불확실성(임시관세 인상,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등) 상존
 - 국가별 영향은 에너지 수입구조, 정부정책 등에 따라 차별화, 일부 국가는 AI 투자 수혜 등에 힘입어 성장세 확대
- * '25→'26년 성장전망(% IMF): (전세계)3.5→3.0 (美)2.1→2.3 (中)5.0→4.6 (유로존)1.4→0.9
- (2027년 이후) '27년은 정책·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 예상되나, 글로벌 성장·교역 확대되고 물가도 대체로 안정세
- * 글로벌 교역량(전년동기비, IMF, 상품+서비스): ('25)5.0 ('26^e)3.5 ('27^e)4.3
- 중장기적으로는 AI·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첨단산업 경쟁 등으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가속화 전망

세계경제 전망(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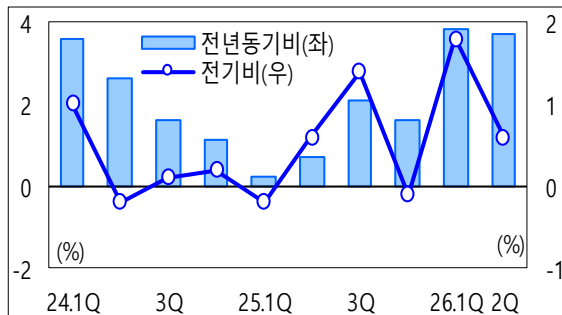
		'25	'26	'27	'28	'29	'30
세계 성장률		3.5	3.0	3.4	3.2	3.2	3.1
- 선진국	성장	1.9	1.7	1.8	1.7	1.6	1.5
	물가	2.5	3.0	2.4	2.1	2.1	2.1
- 신흥국	성장	4.5	3.8	4.5	4.2	4.1	4.0
	물가	5.2	5.8	4.8	4.1	3.9	3.9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6~'27 전망은 7월, 이후 전망치는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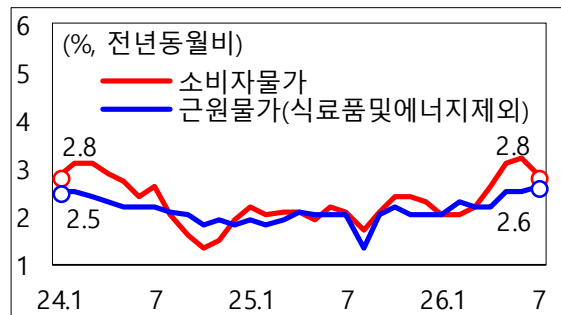
국내경제

- (2026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세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되는 가운데, 물가는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석유류 중심 상승세 시현
 - (성장)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성장 견인, 내수도 소비 증가 지속과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확대로 성장에 큰 폭 기여 예상
 - 경상성장률도 교역조건 큰 폭 개선으로 두 자릿수 성장 전망
 - (물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 되었으나 최고가격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에 힘입어 최근 완화
 - 다만,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 기상영향(예: 폭염) 등 리스크 상존

GDP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2027년 이후) '27년은 성장 지속 가운데 물가 상승세 완화가 예상 되나,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 상존
 - 수출 호조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 기업 투자 확대 등 내수로 이어지며 양호한 성장 흐름 지속 전망
 - 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시 상승세 완화가 전망되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측 압력 및 글로벌 기후변화 등 상방리스크 상존
 -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활용해 부문별 양극화, 잠재 성장률 하방 압력, 에너지·공급망 의존성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

재정수입

- (국세수입)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국세수입 증가세 유지 전망
 - '26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및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경 예산 대비 증가 예상
 - '27년 이후에도 반도체 호조 지속 및 경제 성장세 확산 등에 따라 국세수입은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체납관리단 및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등 징수 노력도 강화
 - 기금수입은 現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재정지출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 세대·지역·계층간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3대 메가프로젝트, AI, 전략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 뒷받침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청년·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예상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소요 확대, 이자지출 부담 등 의무지출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
-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프로세스 구축
 -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
 - 절감된 재원은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완화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

'25~'29년 계획 대비 '26~'30년 부처요구							
(단위 : 조원, %)	'25	'26	'27	'28	'29	'30	증가율
■ '25~'29년 계획(A)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26~'30년 부처요구(B)*		727.9**	844.6	913.4	962.7	1,010.6	8.6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	△0.1	80.2	110.8	128.0	-	-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26.1월말) ** 국회 확정 본예산

Ⅲ. 2026~2030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①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기회를 살려 담대한 재정투자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구조적 전환기 대응의 골든타임 사수
- 반도체·AIDC·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 역량 총결집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세수 증가분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

②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 조정을 상시·지속 단행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
- 그간 성역으로 여겨져 온 의무지출 구조개편에 착수하여 인구·소득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 절감 재원은 핵심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여 단순 감축이 아닌 재정운용의 체질 자체를 개선

③ 투명한 재정운용, 국민주권재정의 실질적 구현

- 국민이 직접 보고 제안하는 국민참여 재정혁신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재정을 구현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9.9%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13.4% 수준 증가할 전망
 -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및 세수기반 확충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 전망
 - 세외수입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1.9% 감소할 전망
 - 기금수입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675.2	700.6	880.8	920.5	951.8	984.6	9.9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606.7	625.5	644.8	13.4
○ 세외수입	38.4	38.4	37.6	37.9	35.1	35.6	△1.9
○ 기금수입	246.6	246.8	258.7	275.8	291.2	304.1	5.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26년 본예산 대비

- 조세부담률은 반도체 호황, 경제 성장세 지속, 국세수입 확충 등으로 국세수입 호조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21~22% 수준 유지 예상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7.0	17.8	22.5	22.4	22.2	21.9
■ 국민부담률	24.1	25.0	29.8	29.9	29.9	29.8

*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재정지출

- 재정지출(총지출)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8.4% 수준으로 관리
 - '27년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하여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28년 이후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 의무지출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8.5% 증가
 -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증가, 국채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재량지출은 '26~'30년 기간 중 연평균 8.3% 증가
 - 잠재성장률 반등 뒷받침,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
 -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병행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727.9	753.0	820.9	894.6	957.4	1,005.2	8.4
(증가율)	(8.1)	(11.8)	(12.8**)	(9.0)	(7.0)	(5.0)	
○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8.5
(비중)	(53.3)	(52.8)	(52.0)	(52.7)	(53.5)	(53.5)	
○ 재량지출	340.2	355.6	394.1	422.8	445.5	467.3	8.3
(비중)	(46.7)	(47.2)	(48.0)	(47.3)	(46.5)	(46.5)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26년 본예산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26~'30년 기간 중 당초 계획('25~'29년) 대비 모든 연도에서 개선될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6년 $\Delta 3.8\%$ (추경 기준, 본예산 $\Delta 3.9\%$)에서 '30년 $\Delta 2.9\%$ 수준으로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6년 $\Delta 1.9\%$ (추경 기준)에서 '30년 $\Delta 0.6\%$ 수준으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세입기반 확충 및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중기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

-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및 체납관리단·신고포상제 확대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조정을 상시·지속 단행하고, 의무지출 구조개편도 적극 추진

□ (국가채무) '30년 GDP 대비 비율을 당초 계획('25~'29년)상 '29년 전망치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관리

○ '26년 50.6%(추경 기준, 본예산 51.6%)에서 '30년 50% 미만(49.0%) 수준으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Delta 107.8$ ($\Delta 3.9$)	$\Delta 107.6$ ($\Delta 3.8$)	$\Delta 3.1$ ($\Delta 0.1$)	$\Delta 48.0$ ($\Delta 1.5$)	$\Delta 83.4$ ($\Delta 2.5$)	$\Delta 100.8$ ($\Delta 2.9$)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Delta 52.7$ ($\Delta 1.9$)	$\Delta 52.5$ ($\Delta 1.9$)	59.9 (1.9)	25.8 (0.8)	$\Delta 5.6$ ($\Delta 0.2$)	$\Delta 20.6$ ($\Delta 0.6$)
■ 국가채무 (GDP대비)	1,413.8 (51.6)	1,412.8 (50.6)	1,519.8 (48.3)	1,600.3 (48.9)	1,659.1 (48.8)	1,734.1 (49.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IV.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기본 방향 >

-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성장 잠재력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에 집중 투자

*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핵심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 (경제) AI 대전환, 신성장동력 육성 등 기술주도 성장 및 농어가 안전망 확충, 지역기반 R&D 강화 등 공정한 성장 도모
- (사회)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안전 일터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전국민 녹색생활 활성화 등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 (행정)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민생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안전한 사회 조성, 국익 중심 외교·안보 구현

- ◇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5대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 발판 마련

* ①AI 대전환, ②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③탄소중립, ④양극화, ⑤지방소멸

- (경제분야) AI 3대 강국을 위한 제조 AI, AIDC 등 총력 지원, 자율주행 투자, 농어업 전략산업화 및 기술주도 성장 기반 마련

- (AI 대전환) 국가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1~2년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고려해 총력 지원
 - 독자 AI 모델 고도화, AIDC 산업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AI 기술주권 확립
 - 피지컬 AI 선점을 위해 R&D·기술실증·데이터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개발·제공
 - AI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독자적 보안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청년 세대의 AI 핵심역량 확보 지원
- (산업·중기·에너지) 제조 AI전환과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반도체, 피지컬AI, AIDC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창업·성장·재도전 기반 확충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지원
- 재생에너지 중심 생산·소비구조 재편 등 에너지대전환 추진
- (SOC)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SOC 건설 사업은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과 국민 교통비 경감에 투자
 - 자율주행 실증도시 및 실증차량을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
서비스 상용화 및 국산 드론 기술개발 지원
 - 모두의 카드(K-pass)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 상향
- (농림·수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및
가격안정제·직불금 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영농의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북극항로 개척,
K-푸드 수출 활성화로 농어업의 전략산업화
- (R&D) 인공지능, 미래에너지,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NEXT 10대 기술분야 투자 확대로 기술주도 성장 기반 마련
 - 지역기반 R&D 역량 강화 및 R&D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주도형 R&D, 투자형 R&D 등 확대 추진
 -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연구생태계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사업화 지원 등 R&D 전주기적 지원 강화

□ (사회분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적극적 고용 안전망 구축,
교육재정 배분 구조 개편 및 탄소중립 대전환 집중 지원

- (보건·복지)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복지 사각
지대 축소, 저출산 대응 강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 저출산 반등 추세를 이어가도록 아동 현금성 지원을 통합·확대
 -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립하고, 현장 이송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일자리) 인구구조·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적극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권리 보호, 안전 일터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한 취업 지원·일 경험·직업훈련 등 맞춤형 노동시장 진입·복귀 촉진 지원
 - 노동 권익 사각지대의 노무 제공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 예방·보호 및 근로 시간 단축 투자 확대
- (교육)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합리화하고, 첨단인재·영유아·평생교육 등 대폭 강화
 - 교육교부금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교부금外 교육 투자를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여 교육단계간 균형 있는 투자
 - 지역대학을 지역 교육·연구·산업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기본 활용부터 실무·석박사급 고급인재까지 단계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3~5세 무상교육·보육,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성인·재직자 재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및 역량개발 투자 확대
- (문화·체육·관광)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기초예술 지원,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문화향유 확대, 관광·스포츠 활성화 등 중점 지원
 - 지속가능한 K-컬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예술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자금·제작·인력양성·마케팅 등) 육성 및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청년문화패스 확대, 공연·전시 지역순회 등 세대·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국민생활체육, 지역관광 활성화 등 지원 강화
- (환경)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축투자 지원, 녹색생활 활성화 등 탄소중립 대전환 가속화
 - 홍수·가뭄·싱크홀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차질없는 배상 지원

□ (행정분야) 민생범죄 대응,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국방역량 강화, 국익 중심 외교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 (공공질서·안전) 민생범죄 대응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수청·공소청 개청 등 사법개혁도 차질없이 뒷받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및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 (국방) 핵추진잠수함·KF-21 등 최첨단 핵심전력 도입으로 우리군 주도의 연합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 향후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군구조 개편(직업군인 확대, 비전투 임무 민간위탁) 및 스마트 강군 육성(AI·드론 등) 적극 추진
 -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통합·정비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 및 안보협력 강화
- (외교·통일) 전략적 ODA 추진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한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실용외교 추진
 - AI·문화 등 전략적 투자 분야에 대한 ODA 지원 확대를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 등 ODA 사업의 국익 연계 강화
 - 재외 거점공관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신속대응 체계 강화
 - 미래세대의 통일 의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 강화
- (일반·지방행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을 강화
 - 범정부 AI 서비스 확산,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뒷받침
 - 사회연대조직의 창업·스케일업 지원,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자생적 생태계 조성

< 2026~2030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26	'27	'28	'29	'30	'26~'30 연평균
총 지 출	727.9 (8.1)	820.9 (12.8)	894.6 (9.0)	957.4 (7.0)	1,005.2 (5.0)	8.4
1. 보건·복지·고용	264.4 (6.3)	289.0 (9.3)	310.2 (7.3)	331.8 (7.0)	352.5 (6.3)	7.5
2. 교육	99.9 (1.5)	110.7 (10.8)	119.0 (7.5)	127.3 (7.0)	132.3 (4.0)	7.3
3. 문화·체육·관광	9.6 (9.7)	11.6 (20.4)	12.6 (8.8)	13.5 (7.1)	14.2 (5.0)	10.2
4. 환경	13.9 (7.3)	14.6 (5.2)	15.3 (4.5)	15.9 (3.8)	16.4 (3.1)	4.1
5. R&D	35.5 (19.9)	39.5 (11.2)	42.4 (7.5)	45.8 (8.0)	48.6 (6.0)	8.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8 (12.7)	41.2 (29.7)	47.7 (15.8)	52.6 (10.2)	55.9 (6.3)	15.2
7. SOC	27.7 (9.1)	28.9 (4.0)	30.0 (4.0)	31.1 (3.8)	32.1 (3.2)	3.7
8. 농림·수산·식품	28.0 (8.3)	30.7 (9.5)	33.0 (7.7)	34.7 (5.0)	35.8 (3.1)	6.3
9. 국방	67.7 (6.8)	73.3 (8.2)	79.1 (8.0)	85.4 (7.9)	92.0 (7.7)	8.0
10. 외교·통일	7.0 (△8.8)	7.1 (1.1)	7.3 (3.2)	7.6 (3.1)	7.8 (3.0)	2.6
11. 공공질서·안전	27.3 (9.2)	28.8 (5.3)	29.9 (3.8)	30.8 (3.3)	31.8 (3.0)	3.9
12. 일반·지방행정	121.4 (9.7)	149.0 (22.8)	175.4 (17.7)	189.5 (8.0)	195.2 (3.0)	12.6

* 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군인연금기금을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 국방분야로 이관하고, 국방분야 지출액은 일반회계 총계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

V. 재정혁신 이행방안

1 전략적 자원배분

예산 편성의 자율성 · 책임성 강화

-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패널티 강화 등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배분한 총액내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
 - 부처의 지출한도 내 자율적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되, 부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등 병행
-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국회보고 강화

미래대응기금 신설

-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핵심 축인 ①청년, ②성장동력, ③지방, ④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
 - 세수 결손 등 필요시, 재정여력 보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2

세입기반 확충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 조세제도 합리화 및 조세탈루 방지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조세지출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 변화 반영한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재설계 등
 - (세제 합리화)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조세제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AI 활용 세정 효율화 및 탈세제보 신고유인 제고 등 조세탈루 방지 강화*
 -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률 상향,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등

3

지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 원칙 및 방향

- (원칙)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구조 개선하고, 절감 재원은 핵심과제에 재투자
 -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방향)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하고, 과감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출구조조정의 질적 수준 제고
 - 지출효율화 TF,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재정 소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의무지출 등 지출구조 혁신

- (교육교부금) 현행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내국세 급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등 한계 지적 多

*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를 자동 배분

- ⇒ 과감한 교부금 개혁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 (산식 개편)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부금 산정*

* 전년도 교부금 $\times (1 + 3\text{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times [1 + (3\text{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times 0.35)]$

-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설치)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 (추가세수 제외 내국세 20.79%와의 차액)은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

※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교육·인재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

- (교부금 보전) 교부금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교부금법」 명시)

- (건강보험 효율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요불급한 지출효율화 및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 '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 '33년 누적잉여금 고갈(현 30조원) 전망

- 건보 수가개혁과 연계하여, 재정은 거점병원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건보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 투자

-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취업 유인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 사중 손실 최소화, 기금 재원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개편 추진

-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현행 주 5일제의 정합성 제고 추진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합리화 등

상시 추진체계 마련

- 민간·학계·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여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상시 지출효율화 추진
 - 지출효율화 TF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과 연계하여 분야별 작업반을 중심으로 상시 추진체계 정비
 - 작업반에 민간·학계·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여 부처·전문가·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도출

◇ 지출효율화 주요 추진 사례

-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부처 간, 부처 내 비슷한 사업·불필요 사업 등을 다수 운영하여 공급정부·수요기업 모두 비효율 발생 중
→ 전부처 유사·중복, 소액·뿌려주기, 성과부진 사업 등을 정리, 고성과 사업, 전략적 집중사업 등에 재투자
- (국가장학금 개편)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되던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이 감소하여 장학금 실효성 약화
→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폐지하고, 대학생 학비 지원 등에 재투자
-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국립 문화·해양문화·청소년수련 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이 전액 국비 지원되어 지방정부의 신규 건립 수요 과다
→ 시설 건립·운영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신규 국립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이용률 제고
- (우체국 건립·운영 등 우정사업 체계 개편)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우체국 우편물량 감소에 따라 우정수지 악화
→ ❶우체국 간 이격거리 기준 재정비 및 ❷우체국 건립 시 민자사업을 활용하고, ❸통복합 청사 활용, ❹AX 디지털데스크 도입 등 추진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민간에 의한 충분한 물류센터 공급, 중소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수요 부족으로 국고보조 필요성 감소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세부사업 폐지

성과관리 제도 개편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을 통한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구축 및 고도화

○ 부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중립적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26년~)

- 평가단의 10% 내외를 민간전문가(시민사회 추천인사 등)로 선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낭비·비효율성을 평가

- 평가 등급을 예산 조치와 직접 연계*하고, 평가결과의 미반영 사유서 등을 공개하여 예산 환류 강화

* (부처 자체평가)우수/보통/미흡 → (통합평가)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 성과관리 제도의 신뢰성·실효성 확보 및 재정 환류 강화를 위한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7~'31)」 수립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및 AI기반 성과관리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

실집행 중심 집행관리

□ 집행관리체계를 자금교부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금 조달 비용 최소화 및 국민의 예산집행 체감도 제고

-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부부터 교부·실집행까지 이어지는 재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민간보조·R&D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실집행을 본격 관리하고('27년~), 지방정부 보조사업 시스템 개편 등 관리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점검 확대, 제도·법령 보강 등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점검 대상 확대 등) 민간보조사업 등 합동현장점검 대폭 확대 및 각 부처 부정수급 후속조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합동현장점검: '25년 606건 → '26년 13,200건 + α(신고센터 접수 건)
 - (제도 보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구축('26.4월), 현장점검 강화 등을 위한 법령 보강,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
 - (거버넌스 강화) 부정수급 건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및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운영
 -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노후화 대응, 행정 환경변화 반영, 국고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고도화 추진

소통 강화

- 예산안 편성지침·예산 편성·성과평가 등 예산 편성 전주기에 걸쳐 일반국민·지방정부·민간전문가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
 - 타운홀미팅, 국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일반국민 제언 충실히 반영
 - 중앙·지방재정 전략협의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예산안 편성시 지방정부 요구를 청취하고, 사업현장도 점검
 -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내실화로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 정부안제출 등 편성 과정의 중요단계마다 실무 당정협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 「모두의 재정」을 통해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국민 재정이해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학습 참여 콘텐츠 강화
 - '26.12월까지 「모두의 재정」을 구축·공개하고 중앙재정 통계 확대는 물론, 모든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연계하여 통합·공개
 - AI친화적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정정보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고도화
 - 쉽고 흥미롭게 재정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재정박물관'을 개관하고 추가 학습관 설치 등 디지털 학습 참여 콘텐츠 지속 확대

국민제안 · 참여 · 소통 활성화

-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편성·집행·환류 등 예산 소 단계 국민참여 활성화로 ‘국민주권재정’ 실질적 구현 강화
 - 신규사업 발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 제안 등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안 반영
 -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참여단·자문단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 국민제안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 * (국민참여단) 토론형 국민참여 활성화, 국민제안사업 집행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참여자문단) 제도 자문 역할 확대 및 국민참여예산 과정평가보고서 작성 등
 - ** 기존 지출효율화 우수제안에 한해 포상 가능 + 개선사업발굴형 우수제안 시상·포상 검토
 - 일반국민의 재정참여 역량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확대 제공

6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재정사업 지방우대

- 지방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지방우대 원칙 대폭 확대 적용
 - '26년 예산에 7개 사업* 시범 추진, '27년 예산안에 본격 도입
 - *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①지원을 차등, ②지원금 상향, ③사업 물량 확대, ④자부담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대 지원

< '27년 적용 예시 >

- ✓(K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차등 지급
- ✓(중소기업 점프업) 바우처 한도 수도권 2.8억원, 비수도권 최대 3.6억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인구소멸지역을 우대하여 지역별 할인율 차등 적용

지방보조사업 자율성 제고

-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사업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 확대
 - 지역 인프라 조성, 주민복지 지원 등 주민밀착 사업과 더불어 지역 주도 R&D,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
 - 포괄보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원규모도 확대

균형성장을 위한 투자제도 개편

- 예타·민간투자 제도를 개편하여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 참여 확대
 - 예비타당성조사·민자사업 평가시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 $\triangle 5\%p$, 지역균형 가중치 $+5\%p$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89개 시군구

※ 「예타 운용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26.5), 관련 상세 가이드라인 개정(26.6)

<참고> 개편방향에 따른 비수도권 가중치 비교

구분	현행		⇒	개편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	인구감소지역
❶ 경제성	60 ~ 70%	30 ~ 45%		55 ~ 70%	30 ~ 45%	25 ~ 40%
❷ 정책성	30 ~ 40%	25 ~ 40%		30 ~ 40%	25 ~ 40%	25 ~ 40%
❸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성장	-	30 ~ 40%		5% 이내	30 ~ 40%	35 ~ 45%

- 일반 국민은 위험부담 없이(펀드 자산은 선순위채+산기반신보 보증)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공공조달 지방기업 우대

-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하여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경쟁 지원 및 입·낙찰 평가 시 우대하는 등 방안 마련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年 최대 5조원, 4년 최대 20조원) 신규 지원
 - (純 국고 지원분: '27년 4.35조원) 지방 기금인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5극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통합 관리
 -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①일반지원 계정(2.85조원)과 ②반도체지원 계정(1.5조원)으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용도에 맞게 자금 집행 관리*
- * 일반지원 계정은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용도
반도체지원 계정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용도로 사용

공공기관 개혁

□ 공공기관 HW/SW 개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HW개혁)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추진('26.3Q~)

* 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선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공기업(5개社) 통합 등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K-마루로 해외지사 일원화 등
 ③ 코레일 자회사(5개社) 통합 등 기능 중심의 수평적 통합 등

- (SW개혁-AI 활용)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7월}, 청년 AI 서포터즈^{7월}, AI 활용 경진 대회^{10월} 등 통해 공공기관 AI 활용의 성과 확산·체감 확대

- (SW개혁-안전 강화)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중대사고 다수 발생 위험작업장 실태조사 확대**

* (現) ①경영실적 부진 ②금품비위 ③성범죄 ④채용비위 등 → (추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

** ('25년) 24개 → ('26년) 104개 확대 예정('26.12)

혁신 조달생태계 구현

□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규격화된 전통적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한 구매절차*(한국형 OTA) 신설('26.12월)

* ①(개방) 정부 제안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 완성, ②(성과) 최종결과물 → 단계별 목표 달성(milestone)시 비용 지급, ③(유연) 변경 제한 → 계약금액·요구성능 등 탄력 변경

- (혁신제품 제도 개편) 로봇 등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지역현장 수요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정주체로 추가**

* 정부·공공기관이 R&D 결과를 직접 기술 실증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

** (현재) 중앙관서의 장(유형 I) →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예정)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돌봄 기본사회 구축을 통해 적극복지 구현
 -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 사각지대 최소화
 - 장애인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돌봄 및 권익보호 지원 확대
 - 한부모가정,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양육부담, 돌봄, 일·가정양립, 주거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
 - 현금성 저출생 지원사업 및 조세지출을 통합하여 혜택 확대
 - 직장·육아 병행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 확대하고 야간·농어촌 등 사각지대 보완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인 돌봄, 소득보장 등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 통합돌봄 본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 기획·추진 지원
 -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및 지역공공병원 지원 확대
 - 지역 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및 AI 기반 진료역량 강화 지원
- 자살유발 정보 차단, 자살시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살시도 초기부터 개입·관리·추적하는 자살예방정책 지원 강화

【참 고】 일자리 분야 '26~'30년 재정투자 중점

- 청년 노동시장 진입·적응 촉진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청년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신설
 -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일경험 확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강화를 통해 채용·근속·소득보전을 동시 지원
-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재구조화
 - 중소기업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컨설팅 참여 청년 AI 인재 대상 활동 수당 신설 등
 -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을 위한 첨단산업 훈련지원 강화, 반도체·피지컬AI 등 직업계고 훈련 지원 학과 신설
- 모성보호·육아지원, 근로시간 다변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출산율 증가에 대응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배우자출산급여 확대, 저소득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프리미엄 신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 노무제공자, 외국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미수금회수 지원 등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교육 확대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근로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접근성·품질 제고

[2] 교육 분야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합리화**하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투자 강화**
 -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고등·평생교육, 영유아 등 **교부금外 교육투자 대폭 확대**로 교육단계별 **균형있는 투자** 추진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역·AI·첨단인재** 등 전략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교육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효율화 병행**
-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축
 - 거점국립대별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간 교육·연구 자원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경쟁력 제고**
 - 지역전략산업과 **대학 인재양성**을 긴밀히 연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통해 지역 **수요기반 대학혁신 강화**
- AI 대전환에 대응하여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기초 활용부터 **산업현장·석박사급까지 단계별 AI·첨단인재 양성**
 - BK21, 이공계 우수인재 지원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학업-연구-취·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성인·재직자의 재교육과 직업·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생애 전반의 역량개발 지원**
 - 성인·재직자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대학을 통해 AI 등 신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AI 재도약 대학 등 재교육 체계 확충**
- 국가책임 교육·보육을 강화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국민 교육기회 보장**
 -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틈새돌봄 등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병행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를 통한 K-컬처산업 기반 조성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및 문화향유권 강화
 - 정책금융 확대로 콘텐츠 투자 마중물을 확보하여 글로벌 콘텐츠 창출, ^{신규}콘텐츠 기업성장 경로 맞춤형 지원 신설
 - 자영업 예술인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과 지역 예술 활성화, 장르별 지원으로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 지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전시 지방 확산 등을 통해 국민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 격차 해소
- 방한 관광객 지방여행 유도, 국민여행 및 지방관광 투자 확대로 지방관광 전성시대를 여는 K-관광 활성화 추진
 - 5극 3특 메가관광권 조성으로 여정별 관광 재설계(659억원), 민간 주도 패노메논 연계 K-컬처 확산으로 방한관광객 유치
 - 국민 지방여행 확대 및 지방 숙박시설 확충(관광숙박 전환 컨설팅 2,000개, 신축 3개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국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전문 체육인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접근성 강화
 -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대폭 확대하고 유·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
 -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의 CT 도입, 경기력 분석 고도화 시스템 신규 구축, 국외 훈련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 지원
-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로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신규}체류형 국가유산스테이(시범, 10개소), ^{신규}국가유적지 활용 휴식 프로젝트(5개소), 공능원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4] R&D 분야

□ 미래 성장을 견인할 NEXT 10대 분야 전략기술 투자 확대

*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 2030 달착륙을 위한 우주·항공 분야, 재생의료 등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 핵융합·SMR 등 미래 에너지원 등 집중 투자

□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견인을 위해 AI 융합 R&D 확산

- AI 기반 산업공정 자율화 전환을 위한 제조 R&D 및 보건·의료 분야(지역·필수의료, 돌봄, 정신건강 등) AI 모델 개발 지원

□ 지역 산·학·연 기반의 지역형 R&D 투자 확대 및 기업의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적 투자형 R&D 도입 및 확산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지역 R&D 추진
-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를 환류하여 재투자

□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우수연구자 육성을 통해 연구생태계 고도화

- 연구생활장려금, 개인기초연구 등 안정적 연구 환경 지속 지원
- 국가과학자 선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육성 추진

□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역할 강화, 핵심 연구역량 집중 지원을 위해 전략연구사업 지속 확대

(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 제조AX 가속화 및 반도체, 퍼지컬AI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 고품질 제조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 반도체 성장거점 확대 및 AI로봇 개발 및 보급 확대 투자
- 전력 인프라 선제적 투자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집중 지원
 - 첨단산업 전력 수요 뒷받침을 위해 전력인프라 투자여력 확보
 -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확대와 수요창출 지원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지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대형 R&D 추진
- 국가 핵심자원의 비축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 석유·핵심광물 확보 및 재자원화 사업 육성 투자 강화
-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창업도전·기업성장 기반 대폭 확충
 - 모두의 창업·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창업 패키지·지역성장펀드 지원 등 지방창업 생태계 조성
 -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점프업 프로그램, 기업성장 융자·보증·펀드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지원
 - 산재보험료·건강돌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상생배달앱 활성화, 혁신제품 개발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특성·테마별 시장·상권 육성 및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할인을 확대, 전통시장 안전 환경 개선 등 매출신장 지원

[6] SOC 분야

- 지역 균형성장,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한 교통·도시 인프라 투자
 -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조성 및 지역 교통망 구축 지원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본격 추진
 - 수도권 광역철도·버스 노선 확충을 통한 출퇴근 불편 해소
-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 완전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차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주행데이터 축적 추진
 - 도심항공교통은 '28년 시범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실증 기체 도입, 버티포트(이착륙장) 구축, 안전운용체계 실증 등 종합 지원
 - 공공분야 국산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비행 실전 역량 강화
- 노후시설·차량 교체부터 주거·일터 화재 예방까지 촘촘한 안전투자
 - IoT·AI 활용한 철도 유지·보수 스마트화 및 공항 안전 인프라 확충
 - 이용객 안전을 위해 차세대 KTX 적기 교체('33~) 추진
 - 일터-보금자리 화재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확대
-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지원 강화
 - 신규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
 - 농어촌, 심야시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대폭 확대
 - 중증보행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강화
- 민간의 SOC 투자 및 우리 기업 해외건설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수주 전방위 지원을 위해, PIS 펀드 조성 지속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기본소득 본격 확산,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
 - 인구감소지역 군(69개)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하고, 공익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강화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목표 대비 민간출연 부족분(0.7조원)을 정부에서 지원(~'30)하여 주민이 원하는 복지·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산, 왕진버스 운영 등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규모화를 통한 농어업 구조개편,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
 - 소농 위주 영농 탈피를 위한 “공동영농 패키지 지원”을 도입하고, 피지컬 AI 보급, AX 등 농어업 스마트화를 가속화
 - 근해어선 집중감척 및 현대화를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
 - 교육·컨설팅, 초기자금 제공 등 청년농 취·창업 지원으로 세대전환
 - 수출바우처 확대, 한식 지식재산권 보호 등 K-푸드 붐 조성
- 농수산물 유통·수급구조 정상화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 공공부문이 직접 참여한 물류센터·유통법인 설립으로 유통혁신을 도모하고,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정책자금 등 확대
 - 선제적 수급관리 고도화를 통한 가격 안정,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등 먹거리사업 지원 확대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 필수농자재 수급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로 식량안보 강화
 - 신기술 활용 및 친환경 영농 확산 등으로 비료 적정량 사용을 도모하고, 원료 비축 등 필수농자재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 이상 수온에 대응하여 양식품종 전환 및 지역 조정 지원

[8] 환경 분야

-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
 -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공급 확대
 -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의한 기업부담 완화,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강화
-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촉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내실화
 - 무공해차 보조금과 함께 융자·펀드·보험 등 금융지원을 다각화하여 무공해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내실화 추진
-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 하천 제방정비·준설 등 치수능력 확대, 선제적·과학적 홍수 정보 제공을 위한 AI 예보체계 고도화 등 치수안전 강화
 - 노후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노후상수도 개량 등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해 지속 투자하여 생활용수 확보·수질개선 노력
- 오염·유해 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 토양·수질·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폐자원 활용 저탄소 에너지 확보에 지속 투자

[9] 국방 분야

- 최첨단 핵심전력 도입으로 우리군 주도의 연합방위 역량 강화
 - 핵추진잠수함 및 KF-21 등의 연차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도입 추진
 -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 및 무기체계 지속 확보
- 향후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직업군인 확대 등의 군구조 개편 및 AI·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적극 추진
 - 부서관 모집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획득 인원을 장기간 활용하는 항아리형 병력구조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경비·제초·제설·시설보수 등 비전투 임무는 민간에 위탁하여, 현역은 감시·수색·매복·경계·타격 등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비전력이 유사시 현역을 지원·보완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현역 수준의 물자와 장비 확보 등을 통해 정예화
 - AI 기술을 활용한 전방 무인감시 고도화, 핵심표적 탐지·식별 능력 제고 등 미래 전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유·무인복합체계 강화
-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통합·정비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 및 안보협력 강화
 - 민통선 복상 조정, 군사장애물 개선, 사격훈련장 인근 부지매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
- K-방산 4대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및 국방 R&D 투자 확대
 - 혁신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공급망 진입까지 성장 사다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방산 강소기업 육성·자립 기반 강화
 - AI·드론·로봇·반도체·우주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전략 분야 기술개발 집중투자

(10) 외교 · 통일 분야

- 개도국 개발과 우리 국익을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 및 외교·경제·문화 영토 확장
 - AI, 문화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 핵심 광물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연계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재외동포 지원 강화
 -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에 대비한 의제발굴 등 사전 준비 추진
 - 재외국민 보호 기반을 강화하여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의 선제적 예방 등 차질 없는 대응체계 구축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역사적 특수동포를 위한 지원 확대
- 학교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인식 개선 및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통한 북한 정보 접근성 제고
 - 평화·통일교육위원 1만명까지 확대·지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도 확대하여 대북·통일 인식 선제적 제고
 - 통일·북한 관련 각종 수집·관리·축적을 통한 대국민 이용서비스 제공 및 지역도서관 역할도 병행 수행

* 북한자료센터를 확대(1실→7실)·개편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민생범죄 대응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수청·공소청 개청 등 사법개혁도 차질없이 뒷받침

○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AI로봇·수사차량 등 치안현장 설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심 치안서비스 제공

○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 → 0.9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지원체계** 강화

* (범죄피해자 국선번호) 121→133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18→142억원 등

** 신규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16개, +260억원)

○ 중수청·공소청 개청 및 법원 사법서비스 인프라 확충* 지원

* 대법원 리모델링(+100억원), 법원 신설(회생법원 2개, 해사·국제상사법원 2개 등 6개소)

□ 기후위기 대응,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AI·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효율화

○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확대(42→54개), 대심도 하수저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의 호우피해 예방(1.1→1.3조)

○ 기업의 자발적인 공장화재 예방시설 구축을 위해 신규화재취약 시설융자(500억원) 및 신규자동확산소화기 보급지원(年 4,000개소)

○ 신규소방로봇 도입(49대), 산림헬기 증강(대형1, 중형1), 신규해안순찰 드론 도입(22대) 등 산불·도심화재·연안안전 대응 체계 첨단화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공공부문 AX 본격화를 통해 행정 내부 AI 혁신을 제고하고, AI 기반 원스톱·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
 - 업무 AI 시스템의 전 부처 도입과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 등을 통해 정부 내부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
 - AI 원스톱 민원플랫폼, 혜택알리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해복구시스템 등에 지속 투자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및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등 정책금융 확대
 -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
 - 중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저금리, 장기, 소액 대출 신설
- 지역 균형발전 및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성 강화
 - 지방성장미래지원금 및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를 신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지역 성장 및 활력 제고 지원
 -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포괄보조) 규모 및 대상사업 확대
- 사회연대경제 모델 확산을 통한 포용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과거사 등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사회연대조직의 창업·스케일업 지원, 인재 양성, 투·융자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자생적 생태계 조성
 - 국가폭력 피해자·유족에 대한 트라우마치유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등 국가부담 강화

【별 첨】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분야	지 표	'26년	'30년
보건·복지· 고용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만명)	34.5	61.0
	■ 노인일자리 수(만명)	115.2	130
	■ 국민연금 수급자 수(만명)	813	979
교육	■ 집중 육성분야 전공별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거점국립대 수(개)	-	3
	■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수혜 확대 (조원)	-	0.75
문화·체육· 관광	■ K-콘텐츠 매출액(조원)	274('25)	400
	■ K-콘텐츠 수출액(억달러)	718	1,100
	■ 방한 외래관광객 수(만명)	2,300	3,000
R&D	■ 기초연구 최고급 연구자수(명)	54	10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10대 업종 AX 데이터 자산화(개)	-	1,440
	■ 지역 성장엔진 설비투자액 증가율(%)	-	6.0
	■ 창업기업 중 기술창업 비중(%)	17.8	20.0
	■ 지역 거점형 대표상권(개)	66	317

분야	지 표	'26년	'30년
SOC	■ 자율주행 실증차량 지원 수(대)	200	3,000
	■ 도심항공교통 시범서비스 개소 수(개소)	-	3
	■ 모두의 카드 가입자 수(만명)	537	1,000
농림·수산 ·식품	■ 농어촌기본소득(개 지역)	17	69
	■ 공동영농법인 지정(개소)	6	100
	■ K-푸드 수출액(억달러)	210	300
환경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633.7	512
	■ 신차 중 무공해차 보급률(%)	23.2	40
국방	■ 방위력개선비 비중(%)	29.5	30.0
	■ 상비예비군(명)	3,700	30,000
외교·통일	■ 남북협력기금 규모(억원)	10,023	10,534
공공질서· 안전	■ 보이스피싱 피해액(억원)	12,089	5,549
	■ 재해위험지역정비(조원)	1.1	1.3
일반· 지방행정	■ 국민성장펀드 규모(조원, 누적)	1.0	5.0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규모(조원)	1.15	1.5